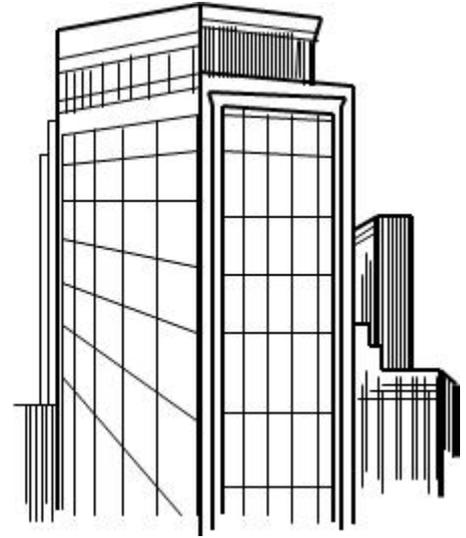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2. 5. 1. ~ 2022. 5. 31.



정책이슈

- ▶ 한덕수 총리 "중대재해처벌,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법 개정 시사 P. 1
- ▶ 한은, 0.25%p 금리 인상..."성장보다 물가안정" P. 2
- ▶ 국회서 발목 잡힌 법안에 우리 에너지 정책 갈 길 멀다 P. 3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 ▶ 전기공사협회, 제도 개선으로 업계 혼란 해소 P. 4
- ▶ 조합원 비용부담 '확 낮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 맞춤 금융'으로 도약 P. 5
- ▶ 전국 최초 전기인 자매 광역의원 탄생하나! P. 6
- ▶ 한전 구하기 나선 정부...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P. 7

금융

- ▶ 월간 경제지표 P. 8
- ▶ 5월 금융통화위원회 :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영 시사 P. 9
- ▶ 미연준의 예고된 빅 스텝 인상과 양적 긴축 발표 P. 9
- ▶ 버블 공포와 신용 리스크: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한 버블 논란과 제2의 나스닥 버블 논란 P. 10

경제·정책 이슈

▣ 한덕수 총리 “중대재해처벌,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법 개정 시사

1. “일종의 규제, 산업계 지적에 동의하지만, (개정)타이밍 언제일지는 잘 몰라”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며 법 개정을 시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인 뜻을 표시하며, 지난 1월 시행한 이 법을 손 볼 뜻을 밝힌 것.
-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 그 부분도 한 번 좀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발언. 다만 한 총리는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임.
- 한 총리는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시이오(CEO)와 외국 시이오가 책임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가능한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발언.
-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

2. 윤 대통령 뜻과 무관하지 않은 듯

- 한 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 한 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말함.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발언.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도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가 포함.

(한겨레, 5. 25.(수))

▣ 한은, 0.25%p 금리 인상..."성장보다 물가안정"

1. 15년 만에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P) 인상. 지난달 14일에 이어 2회 연속 인상.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올해 1월과 4월에 이어 약 9개월 사이 다섯 번이나 금리 인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처음.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0.75~1.00%p로 벌어짐.



2. 금통위 "치솟는 물가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

- 한은이 이례적으로 2회 연속 인상을 단행한 건 치솟는 물가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지난 2월 3.1%보다 크게 높여 잡은 4.5%로 예상.
- 한은의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11년 7월(연 4.0% 전망) 이후 10년 10개월 만으로,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이 큼을 말해 줌.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전자신문, 5. 26.(목))

▣ 국회서 발목 잡힌 법안에 우리 에너지 정책 갈 길 멀다

1. 에기본 근거 만들기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이번 산업위 소위에 상정 안 돼

-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폐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후속조치.
- 녹색성장기본법은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이었지만 이번에 폐지되면서 에기본이 갈 길을 잃음. 해당 계획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 제4차 에기본이 먼저 빠르게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
- 윤석열 새정부가 원전 계속 운영방침을 세우면서 오는 2030년 기준 8.5GW 수준의 설비용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인 만큼 전기본에도 이 같은 전원계획을 담기 위해선 우선 상위 계획인 에기본에 정부 방침을 녹여야 하기 때문.

2. 제10차 전기본에 원전 확대 계획 담아야 하는데 상위법 표류에 방향 잃을까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아직 수립할 시기가 되지 않은 제4차 에기본 작성을 앞당겨가며 원전 확대 계획을 담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설명.
-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소위에도 해당 법안 개정안이 논의선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는 것.
-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원전 관련 로드맵 수립을 통해 제10차 전기본에 원전을 포함한 전원계획을 담는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지난 문 정부 때 이미 현 여당이 한 차례 대립한 적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만 이번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올해 제4차 에기본 수립도 표류하게 됐다"고 발언.

(전기신문, 5. 9.(월))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전기공사협회, 제도 개선으로 업계 혼란 해소

- 전기공사협회가 입찰 혼란을 막기 위해 철도공단과 제도 개선. 공사 입찰 때마다 업체를 혼란스럽게 한 지역업체 소재지 기준을 하나로 정립한 것.
-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입찰 참여 과정에서 평가되는 업체 소재지의 기준일을 공고일 전일로 확정. 기존에는 공단의 기준일이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일 90일 전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 혼란 발생함.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기준일의 일원화를 공단에 요청해왔는데 요청의 타당성을 공단이 받아들인 것.
- 소재지 기준일이란 말 그대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어느 지자체에 속해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날짜를 지칭. 여기서 기준 날짜란 입찰 공고일 기준 며칠부터 소재지 등록이 됐을 때, 해당 업체를 해당 지역 소속이라고 평가하는 날이 됨. 예를 들어 4월30일까지 서울에 있던 업체가 5월 1일에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면, 4월까지의 서울 소재지, 5월부터는 부산 소재지의 회사가 되는 것.
- 소재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란 공공공사를 할 때, 공사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소재지 업체에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됨. 문제는 소재지 기준일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임. 부산에서 5월 2일에 공고가 된 공사가 있는데 소재지 기준일이 공고일 전날까지라면, 5월1일까지 부산에 자리잡은 업체는 모두 입찰 자격을 얻는 반면 기준일이 공고일 90일 전이라면, 5월1일에 이사를 온 업체는 해당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
- 전기공사협회가 국가철도공단에 기준일 정립을 요청한 건 들쭉날쭉한 기준 때문. 똑같이 공단이 발주한 공사임에도 그동안 공사에 따라서 소재지 기준일이 서로 상이해왔음. 일례로 공단이 같은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인데도 A공사는 소재지 기준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이며, B공사는 '공고일 전일'로 발주되는 촌극이 벌어짐.

(전기신문 5. 23.(월))

■ 조합원 비용부담 '확 낮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 맞춤 금융으로 도약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 정책이 조합원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음. 낮아진 금융 비용은 조합 금융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실적 증가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조합은 주력사업인 보증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낮춤. 2020년 조합원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 수수료 인하를 실시한 조합은 2021년에 또 다시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공사이행 보증 등 주요 상품 수수료를 20% 일괄 인하. 연이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조합은 보증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제공.
- 최근 4년간 조합은 주요 보증상품 수수료를 상품별로 32% 또는 40%가량 낮춤. 2017년에 계약보증이나 선급금보증 수수료로 100만원이 들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68만원만 납부. 하자보증 수수료는 인하 폭이 더 커 2017년 100만원의 수수료가 60만원 수준으로 하락.
- 조합관계자는 "자재비 급증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선제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건설공사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조합원님의 신용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함.
- 매년 두자릿 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공제사업은 지난해 매출 569억원을 달성하며 매출 500억원 달성. 조합관계자는 "수수료 등 비용을 낮춰 조합원사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이용을 활성화해 전체 사업수익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조합 재무건전성도 함께 높여오고 있다"며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조합원사에 대한 이익환원은 물론, 지속적인 금융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함.

(대한전문건설신문 5. 27.(금))

■ 전국 최초 전기인 자매 광역의원 탄생하나!

-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전기인 자매 광역의원 탄생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친자매인 이재화(66) 전 시의원을 서구2선거구에, 이재숙(53) 전 구의원을 동구4선거구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힘.
- 언니 이재화 후보는 48년 전인 1974년 전기공사업체에 근무. 근무했던 천일 전기 옆에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 대구 사옥이 위치. 협회 남자 직원이 군입대로 결원이 생기자 5급 정식직원으로 취업. 결혼 후 협회를 퇴사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에 취직.
- 언니가 조합을 그만둔 후 동생 이재숙 후보가 조합에 입사. 1988년 조합에 입사한 동생은 1994년 결혼으로 퇴직 후 남편을 따라 강원도로 이사. 남편 직장의 경영난으로 1년 후 대구로 다시 돌아와 언니가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근무. 독립 후 전기공사업체를 개업.
- 이재숙 후보는 "전기공사업에 건설업으로 분류돼 제조업보다 은행 대출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더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전기공사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라고 밝힘. 전기공사업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두 자매는 "대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시의원으로서 확실히 수호하겠다"라고 발언.

(전기신문 5. 10.(화))



이재화 후보(왼쪽)와 이재숙 후보.

■ 한전 구하기 나선 정부...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 정부가 한국전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함. 1분기에만 7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를 낮춰주겠다는 것.
- 한전은 민간발전사들이 판매하는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받는 형태로 사업. 민간 발전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 SMP를 함께 올리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한전은 비싸게 사온 전력을 싼 값에 팔면서 적자 규모가 커짐.
-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SMP는 1kWh 당 181원으로 작년 1분기(76.5원) 대비 137% 증가했다. 반면 판매단가는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 수준인 1kWh당 108.1원으로 추정. 구매한 가격의 60% 수준으로 전력을 팔고 있는 셈. 정부는 이 같은 기형적인 사업 구조를 막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를 담은 고시를 예고했다고 24일 밝힘.
- 이번에 도입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 지난달 SMP는 kWh당 200원을 넘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전의 전력구입가는 과거 SMP 10년 평균의 125%로 제한된다. 한전 입장에선 kWh당 130~140원 정도에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
-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민간 사업자 팔 비틀기'라는 비판. SMP 상한제 도입되면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보전해 줄 수 있지만,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는 민간 발전사는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든 원가(발전연료비)가 SMP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줄 방침"이라며 "사업자 과도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

(조선비즈 5. 24.(화))

금 용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2. 5. 2. ~ 2022. 5. 27.

구 분	변 동 폭	5. 2 기준가	5. 27 기준가
KOSPI	▼ 49.4	2687.45	2638.05
KOSDAQ	▼ 27.85	901.82	873.97
S&P500	▲ 2.86	4155.38	4158.24
CD(91일, %)	▲ 0.24	1.72	1.96
국고채(3년,%)	▼ 0.139	3.086	2.947
회사채(3년, AA-, %)	▼ 0.066	3.794	3.728
국고채(10년, %)	▼ 0.168	3.380	3.212
미국고채(10년, %)	▼ 0.234	2.977	2.743

□ 증시

- [국내] 중국 경제붕쇄 등 대외여건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속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부담, 금리 오름세로 주가지수는 소폭 하락.
- [미국] 고(高)인플레이션발 경기 둔화 우려와 유통주(월마트), 기술주(스냅) 기업 등의 실적 쇼크로 2년내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 및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소폭 반등.

□ 금리

- [국내]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상방을 우려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인상.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높은 물가에 대응하는 미연준의 행보가 이어졌고 속도 높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낮춰 경기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

■ 5월 금융통화위원회 :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영 시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함. 인상 결정 배경에는
 - ① 성장보다 물가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②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③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
-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당초 3%였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하향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5%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
- 금통위는 경제 성장 둔화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인플레이션 대응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밝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출처: 교보증권 5.26(목))

■ 미연준의 예고된 빅 스텝 인상과 양적 긴축 발표

- 미 연준은 5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50bp 인상하고(0.50→1.00%) 6월 1일부터 양적긴축을 시작한다고 발표.
- 양적긴축은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중단으로 진행되며 475억(국채300억/MBS175억) 달러로 시작해 3개월 후에 950억(국채600억/MBS35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며 양적 긴축 속도를 높임.
- 중국 경제붕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아 향후 물가 상승이 억제 되지 않을 경우 긴축은 더 강화되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중립금리 : 인플레이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

(KB증권, 하나금융투자, 5.6(금))

▣ 버블 공포와 신용 리스크: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한 버블 논란과 제2의 나스닥 버블 논란

-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사이클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가상화폐 가격과 기술주의 주가의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우선, 가상화폐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IT 버블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또 다른 위기로 전이돼 시스템리스크*화 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손실이 여러 국가에 분산된 손실이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그 현실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
- 나스닥지수는 지난 5월 11일 고점대비 약 29% 조정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FANG(Facebook, Apple, Netflix, Google)의 경우 고점대비 약 40% 폭락하면서 IT 버블 당시의 나스닥 흐름을 재연.
- 성장주 버블 붕괴와 관련하여 2000년 당시와 비교하여 하이테크업종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2020년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GDP의 10.9%로 뚜렷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버블 재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과잉 유동성 축소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이 가상화폐 및 나스닥 시장의 버블 붕괴와 같은 신용리스크를 촉발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하이투자증권, 5.23(월))